

한국 경제위기를 진단·처방하는 다양한 시각

원인규명부터 체질개선까지 해법 제시하는 책들 풍성

'경제신탁통치', '정축국치', 3고(고실업·고환율·고물가) 3저(저성장·저투자·저주가)', '마취 없이 시작된 암수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라는 가공할 '빙하기'에 한국사회에서 유령처럼 떠도는 흥흉한 풍문들이다. 거리로 내몰린 고단한 영혼들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하고 'IMF범죄'라는 사회병리 현상마저 창궐하고 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처럼 몰아닥친 IMF 한파에 모두 몸살을 앓고 있지만, 출판계는 한국 경제위기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책들로 부산하다. 난마처럼 얹힌 실타래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다양한 입장과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관료·재벌·금융개혁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풀빛)는 7명의 경제전문가들이 각 경제분야에 걸쳐 경제위기의 근본원인과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한국경제의 특징으로 개발독재 시기 경제체제의 모순과 정경유착, 재벌의 소유지배 집중과 무분별한 팽창, 관치금융과 금융산업의 낙후, 정부의 정책부재와 관료의 무능 등을 거론한다.

국민대 조원희 교수는 〈한국경제체제의 개혁구상〉에서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개발독재시대에 잉태된 '한국형 자본주의체제'에서 찾는다. 이 체제의 비민주성, 비공개성, 철저한 위계적 명령과 복종구조로 인해 권력의 중앙집중, 특권집단에 의한 권력독점, 노동시장의 유연성 상실 등을 가져왔다 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자는 재벌의 해소, 정치의 민주화, 정경유착 타파, 민주화와 체제개혁을 통한 세계화 등을 제시한다.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혐오와 개혁 방안〉에서 홍영기 입법조사연구관은 재벌의 전제적 소유지배구조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진단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유분산 및 지배집중의 해소, 그에 기초한 지배구조의 합리화, 그리고 노동자 참여가 실현되는 방향에서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할 것을 강조한다.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가 독립된

IMF한파에 모두 몸살을 앓고 있지만, 출판계는 한국 경제위기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책들로 부산하다. 제 살을 도려내는 자기희생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빠아픈 자기반성이 없는 한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충고한다.



연구자들의 성과물이라면, 『한국경제 – 과거, 현재, 그리고 21세기 비전』(비봉출판사)은 상호토론의 결과물이다. 강원대에서 〈한국경제의 이해〉를 강의하는 교수들이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원인과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들은 한국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으로 넘어설 수 있었던 조건으로 '잘 살아 보자'는 국민적 합의와 열정,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 국제경제 환경으로서의 자유무역주의의 확대 등을 꼽는다.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경제성장에 대한 열정의 약화, 암기 위주의 교육, 한국시장의 전면개방 등으로 인해 종래의 경제체제와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에 따라 경제 각 부문의 자유화, 금융시장의 선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삶의 질'의 향상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관료와 재벌 신화의 해체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백산서당)는 서울대 정운찬 교수의 경제칼럼집이다. 저자는 한국경제의 부실화 요인으로서 재벌들의 선단식 경영과 문어발식 기업확장, 재벌과 결탁하고 정치권력의 조정을 받는 경제정책 입안자들의 특혜금융 등을 논하면서, 정치권력의 이해보다는 경제논리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벌을 논하는 자리에서 저자는 "과거 대

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은 한국경제가 소수 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를 낳았다"면서 재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거시적 산업정책은 유지하되 미시적으로는 사전적 대출심사와 사후적 여신관리를 철저히 하는 금융자율화, 재산세·상속세제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한다. 금융개혁 방안으로는 금융자율화 정책, 은행부 실체권의 청산, 한국은행의 독립과 금융감독 체제의 올바른 개편,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등을 내놓는다.

경제전반을 의제로 올린 앞의 책들과는 달리 『관료망국론과 재벌신화의 붕괴』(살림)는 관료와 재벌의 모순과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인 문화일보 박태건 기자는 고위 경제관료와 대기업 간부, 금융권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취재를 통해, 경제관료와 재벌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양대 집단이었지만 '한강의 물력'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비판한다. 재정경제원으로 대표되는 경제관료들은 IMF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재벌의 경우도 IMF의 투명성 요구에 직면해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 변혁을 단행하지 않는 한, 관료와 동일한 몰락의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고 일침을 놓는다.

비깥에서 본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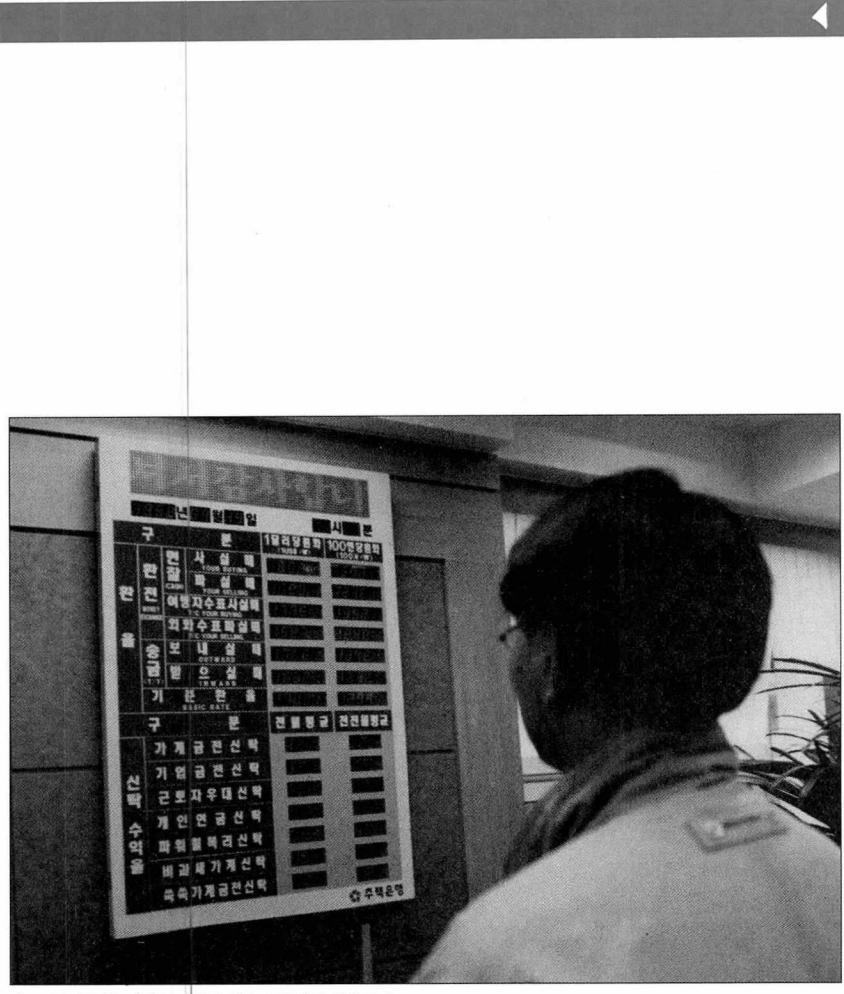
외국 학자들과 컨설팅 업체에서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국보고서』(매일 경제신문사)는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부

즈·앨런&헤밀턴의 연구용역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먼저 한국이 정부주도 성장모델로 눈부시게 성장했으나,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의 협공을 받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경제구조, 정부의 역할, 그리고 한국의 대외관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한국은 세계 2류 경제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한국의 경제개혁이 실패한 원인으로 문제점의 본질과 그 심각성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의 결여,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경제력 집중, 부도와 실업, 금융제도의 실패)에 대한 지나친 염려, 변화를 주도·실행할 적합한 기관과 메커니즘의 결여 등을 꼽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신사회 패러다임'에 입각해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 짓는다. 즉 정부는 그 역할을 크게 축소하고 고객 우선주의에 입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은 개방된 시장환경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또한 세계환경에 유연한 적응력을 갖춘 신세대 한국인들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세계 석학들의 견해를 담은 『세계의 석학 11인이 내다본 한국경제』(창해)는 MBC 김상철 기자가 폴 새뮤얼슨, 레스터 서로, 프랜시스 후쿠야마, 새뮤얼 헉팅턴 등과의 대담을 엮은 것이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태풍의 핵으로 등장한 환율위기.

풀 새뮤얼슨은 한국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가, 한국의 재벌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나친 경제적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가,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고 본다. 제임스 부캐넌은 한국에서는 정부의 경제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놀라운 성장을 이룩한 사례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한국정부가 개입을 더 적게 했더라면 한국의 경제성장은 더 활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낮은 수준까지 모든 수준의 노동력이 다시 창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레스터 서로, 한국에서 정부개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이제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권력을 분산할 때라고 충고하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등의 견해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빼아픈 자성 촉구

IMF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국내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제시한 책도 나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펴낸 『IMF와 한국경제』는 IMF지원을 요청한 1997년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IMF사태의 배경과 그 경과, IMF 지원금의 조건과 경제환경 변화, 그리고 경제전반에 걸친 영향을 분야별로 설명한다.

IMF시대에 기업의 대응전략도 제시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현금흐름 중시의 비상경영체계, 경영 전부문의 거품 제거 등을,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유후 인력의 전환배치, 채용의 유연성 유지 등을 추천한다. 한편,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업활동을 펼칠 것도 주장한다. 즉, 내수중심 사업은 보급형 모델 개발에 주력하여 불황을 타개 할 수 있는 히트상품을 창출하고, 투자 회임 기간이 짧고 투자규모가 작은 상품을 우선 개발하며,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여건 호전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경제진단서들은 입장과 분석틀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의 경제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소나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예비되어 온 태풍이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 재앙을 막지 못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위기불감증'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구조적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도 명백하다. 우리가 겪고 있거나 치러야 할 고난들은 뒤늦은 자각의 대가이다. 제 살을 도려내는 자기희생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빼아픈 자기반성이 없는 한 한국은 미래가 없다는 것도 이러한 책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 박천홍 기자

